

1980년대 초 남북한의 제3세계 외교경쟁

: 공개 외교문서(1979~1981)를 중심으로

김지형(서원대학교)

논문 요약

이 글은 신냉전기인 1980년대 초, 제3세계를 대상으로 한 남북한 외교경쟁의 실상에 대하여 외부부의 공개 외교문서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와 그 속에 반영된 상호인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남과 북의 외교 상대국들은 대부분 제3세계였다. 따라서 제3세계에 대한 외교활동의 비중과 의미가 매우 컸다. 남과 북은 이들 나라들을 대상으로 자국 지지 또는 상대국 비난에 상당한 외교 역량을 소진하였다. 외부부는 남북 외교대결이 격화되는 조건에서 남한의 우위를 견지하고자 하였으며, 유엔과 비동맹 등의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반한(反韓)책동을 봉쇄하는 데 진력하였다. 주재국 내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활동을 주시하고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으며, 그것이 곧 냉전기 한국 외교의 본령이었다. 또한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북한에 경도된 나라들을 중립화 또는 상쇄시키기 위한 적극 외교를 기울였다. 따라서 한국 외부부는 안보외교를 통한 ‘친한(親韓)’외교를 추구한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북한은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등 비동맹운동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3세계에 무기수출을 본격화하면서 군사외교를 전개해나갔다. 북한은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에 대해 시종일관 무시전략으로 응대하였으며, 이같은 비대칭관계가 외교무대에서 더욱 대결적인 남북관계로 이어졌다. 제3세계 외교무대에서의 남북 대결은 서로의 외교적 성과를 지연, 방해, 저지 또는 차단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상대국의 행사와 활동을 방해하고 비방하였으며, 상대방의 약점을 자극하고 역전전함으로써 전형적인 냉전기 제로섬 게임의 범주 안에 머물고 말았다.

주제어 : 남북관계, 제3세계, 신냉전, 비동맹, 군사외교, 친한외교

I. 시작하며

1955년 인도네시아 반동회의에 참가한 29개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은 반식민주의와 비동맹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제3세계 운동을 열어나갔다. 그후 1961년 유고의 베오그라드 비동맹 정상회의를 계기로 본격화된 비동맹운동은 1970년 잠비아 루사카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경제개발에 관한 자주적 성장문제가 크게 다루어지면서 남북문제(The North-South Axis in World Politics)와 자원분배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1979년 아바나 제6차 회의에는 92개국 이 참여하여 반식민주의와 비동맹주의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 문제를 모두 다루어 나가는 경향을 띠기 시작하였다.¹⁾ 이같은 배경 속에서 1979년 말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계기로 미소관계가 신냉전 시대로 돌입함에 따라, 국제 정세는 1985년 고르바초프, 레이건 회담시까지 불안정한 양극 체제 속의 다극체제를 형성해나갔다. 그로 인해 제3세계의 존재감과 영향력 또한 상대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제3세계는 1980년대 전 세계 국가의 85%, 전체 인구의 59%를 차지하였으며, 당시 한국의 수교국 가운데 90%, 북한의 경우도 89%에 달할 정도로 남북한 외교에서 제3세계가 차지하는 양적 비중이 매우 큰 상태였다. 이같은 여건 속에서 한국은 분단국으로서의 특수상황적 시각에서 제3세계를 남북한 간의 대결장으로 간주하는 성향을 드러냈다. 대북한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 북한 견제, 북한 고립화를 위하여 제3세계를 활용하였고, 제3세계 국가들에게 대북한 봉쇄와 친한(親韓) 및 반북(反北)을 강요하였으며, 실리적 관계의 증진보다 대결적 소모전에 역점을 두었다.²⁾ 그 결과, 남북은 냉전기와 신냉전기를 거치면서 제3세계를 무대

1) 박종평 “제3세계의 외교정책과 한국.” 『망장』 1월호, 1983, p. 145. 1970년대까지의 비동맹운동에 대한 개설적인 글로는 다음의 논문들이 참고된다. 하경근 “비동맹운동과 한국.” 『국제정치논총』 제20집, 1980; 유종해 “비동맹 운동의 특징과 그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21집, 1981 등.

2) 서재만, “제3세계 외교.” 『국제정치논총』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88, p. 157~161.

로 항상적인 외교 대결을 지속하게 되었으며, 제3세계 또한 코리아문제에 대한 국제 여론에 끊임없이 관여하게 되었다.

이 글은 1980년대 초 남과 북이 제3세계를 대상으로 어떻게 경쟁했으며 무엇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과거 남북한이 각각 자신의 체제와 이념적 정당성에 기초하여 제3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무대에서 벌인 경쟁의 실체를 분석함으로써 냉전시기 한국외교사의 한 단면을 객관적, 상대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이같은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동감 있는 자료의 확보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최근 공개된 1980년대 초의 외교사료(1979~1981)를 1차 사료로서 적극 활용함으로써 제3세계를 대상으로 한 남북의 경쟁적 외교 활동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시기 제3세계 주재국에서 생산된 외교문서는 대체로 중남미 지역에 집중돼 있는 형편이다. 중남미 지역은 이념적 성격이 뚜렷한 아시아지역이나 산유국으로서 실리외교를 띠는 아랍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북간의 냉전적 외교대결이 정면으로 벌어지던 지역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남북한 외교경쟁의 실상을 확인함으로써 신냉전기 남북관계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동안 제3세계를 무대로 한 남북한의 외교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개설적인 연구에 그쳐왔다. 시기별 개괄과 동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 이유는 냉전기 남북한의 외교를 엿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료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쪽의 경우, 외교사료의 공개 조치에 따라서 구체적인 외교정책의 실상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물론 당시 외교사료가 모두 비밀해제된 것은 아니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위생처리된’ 공개이지만, 1980년대 초를 대상으로 한국 외교정책의 실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분석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달라진 조건이다. 따라서 공개 외교문서에 입각한 1980년대 초 남북한의 외교경쟁에 대한 본격적인 시도라는 점이 본 논문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이 시기 북한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부문서에 의거한 연구는 아니지만 일정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왔으며³⁾, 이 글에서도 적절하게 참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글은 북한의 외교정책을 한국 외교문서를 원도우로 하여 접근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외교경쟁에 치중했던 한국 외교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 외교문서를 통해 북한 외교의 세밀한 면면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유용한 자료로 삼아 적절하게 활용하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내밀한 외교문서들을 볼 수 없는 조건에서 한국 외교문서와 기존 연구성과들에 기초해 좀더 사실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본 논문은 1980년대 초 제3세계를 대상으로 한 남과 북의 외교를 각각 분절적으로 접근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사의 맥락에서 외교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한국의 제3세계 외교정책, 북한의 제3세계 외교정책 등 독립적으로 접근해온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하며, 공개된 외교문서를 기초자료로 하여 좀더 구체적인 사실을 구명하고자 한다. 이는 동시에 기존연구의 이론적, 이데올로기적, 개괄적 경향이라는 한계를 넘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시기는 전두환 신군부세력에 의해 정치권력이 재편되던 체제 변동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군부에 의해 추구된 남북관계가 제3세계 외교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이 글의 또 다른 탐구 주제가 된다. 이로써 1980년대 초 남북관계사의 맥락에서 한국의 외교역량이 무엇을 추구하였는지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3) 본 논문의 연구대상 시기와 관련하여, 북한의 제3세계 외교정책에 대한 논문으로 다음의 글들이 참고된다. 박재규, “북한의 제3세계 군사외교정책,” 『남북한 정치통합과 국제관계』,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1986; 유석렬, “북한의 제3세계 외교정책과 실태,” 『안보연구』 제16호, 동국대 안보연구소, 1986; 전현준, “제3세계에 대한 북한의 외교정책과 향후 전망,” 『전남개발』 제23호, 1990; 이기중, “북한의 대 제3세계 비동맹 외교정책,” 『고향정치학회보』 제1호, 1997 등. 연구서로는 다음의 책이 독보적이다. 김태환, 『북한의 제3세계 외교정책』,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1987.

II. 한국의 안보외교와 친한(親韓)외교

박정희 정부는 1973년 이전까지 할시타인 원칙(Hallstein Doktrin)을 고수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제적 봉쇄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전환에 따라 이후부터 제3세계를 대상으로 대북한 외교 대결을 벌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제3세계를 상대로 한 외교무대에서의 남북대결은 1980년대 초에도 지속되었으며 신군부의 외교정책으로 계승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제3세계를 외교적으로 긴요한 지역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이데올로기적인 긴장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1981년 5월 외무부가 작성한 ‘남북 외교 대결에 있어서의 제3세계의 중요성’⁴⁾이라는 문서에서는 제3세계를 선발 개도국, OPEC 회원국, 개도국, 최소국(Mini-State) 등으로 구분하였다. 제3세계 국가의 성향으로는 대부분이 비동맹 회원국으로서 민족주의적 색채 즉, 반(反)제국, 반(反)식민주의, 반(反)서방 경향이 농후한 것으로 보았으며, 독립 초기의 이념에 기초한 정치적 이상 추구로부터 점차 현실적 경향을 띠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남북문제 해결, 신국제질서 수립을 촉구하는 반제 해방 운동에 공산주의세력이 침투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특히 북한이 1950년대부터 제3세계에 영향력을 미쳐온 것으로 판단하였다. 북한은 1970년대에 들어서 ‘친선’을 기치로 제3세계 외교를 적극 강화하였으며 약 60여개 국가와 새로이 수교하였다. 그에 따라 남북한 수교국의 수는 1970년도 81 : 35로 격차가 뚜렷했으나, 1979년에 이르면 111 : 95로 차이가 좁혀졌다.⁵⁾ 1981년 시점에서 남북한의 수교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3개국 중 남북 공동 수교 55개국(45%), 남한 단독수교 36개국(29%), 북한 단독수교 27개국(22%), 공동 미수교 5개국(4%) 등이었다. 상주 공관 설치의 경우, 미상주 33개

국(27%), 북한 단독상주 31개국(25%), 남한 단독상주 30개국(24%), 공동상주 29개국(24%)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비동맹 95개국의 경우, 동시수교 45개국(47%), 북한 단독수교 27개국(29%), 남한 단독수교 16개국(17%), 기타 7개국(7%) 등이었다. 즉, 제3세계를 대상으로 한 남북한 수교경쟁에서 한국은 단독수교국이 더 많았지만 상주 공관의 경우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며, 비동맹국일 경우 북한의 단독수교국이 남한보다 더 많았다. 1980년 현재 제3세계 주요 인사들의 방문초청 역시 북한의 우세로 나타났다. 남한은 54개국에서 146회 방문한 반면, 북한은 81개국 166회로 파악되었다. 방문 및 사절단 파견의 경우, 남한이 39개국 46회, 북한이 71개국 196회로 월등한 제3세계 외교력을 보여주었다.⁶⁾ 1983년 8월 현재, 남북한의 비동맹국 수교 현황은 한국 62개국, 북한 72개국으로서 여전히 북한 우위로 확인된다.⁷⁾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80년대 제3세계를 대상으로 한 한국 외교의 기본 방향은 “외교, 안보, 경제적 친한(親韓) 외교 기반화”로 설정되었다. 구체적인 외교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3세계에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제압하는 것이다. 남한 지지세력을 확대하고 미수교국 및 북한 단독 수교국과의 수교로 제3세계 외교망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남북의 공존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남북한의 유엔가입과 한국의 비동맹가입 여건을 조성하며, 유엔 및 각급 비동맹회의에서 북한에 의한 ‘반한(反韓) 책동’의 근원적 봉쇄를 추구하였다. 이같은 목표를 위해 무상원조, 경제협력, 방한 초청, 사절단 파견 등의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무상원조 분야의 경우, 제3세계의 실리 추구 외교경향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였다. 무상원조 대상을 최소국과 기타 개도국 등 2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최소국 34개국(대상국의 50%)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삼았다. 경제협력 분야의 경우, 쌍무 경제협력 제공, 과학기술

4) 외무부 북미과, “남북한 단독 수교국에 대한 외교활동 기본방침.”(등록번호: 9511, 분류번호: 721.1) 부가문서, 1981.

5) 허문영, “북한 외교정책 변천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10집, 1994, p. 522.

6) 외무부 북미과, 위의 문서.

7) 유석렬, “북한의 제3세계 외교정책과 실태.” 『안보연구』 제16호, 1986, p. 57, <표6> 참조.

훈련생 접수, 지역기구와 유엔기구를 통한 협력을 추구하였다. 방한 초청 분야와 사절단 파견 분야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정하였다. 방한 초청의 1차 목표는 미수교국 및 북한 단독수교국을 대상으로 32개국, 2차 목표는 수교국 대상으로 91개국이었다. 사절단 파견 역시 1차 목표로 미수교국 및 북한 단독수교국 대상으로 32개국, 2차 대상국은 수교국 대상으로 91개국을 정하였다.⁸⁾

한국 단독수교국들에 대한 외교활동의 기본 목표는 ‘북괴와의 수교 저지’였다. 최(最)주요국가로 구분된 구미, 아시아, 중동지역 주요 우방들의 대북수교는 반드시 저지할 뿐만 아니라 주요국가군에 해당하는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지역 제3세계 우방들의 대북수교는 ‘최대한 저지 또는 지연’하고자 하였다. 태평양, 카리브제국(Caribbean),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우방 등 군소국가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대북 수교를 저지 또는 지연시키하고자 하였다. 이 중 제3세계에 해당하는 주요국가 및 군소국가에 대한 대책으로써 무상원조 내지 실질 협력관계의 강화, 상징적 원조 내지 실질협력 방안의 시행 및 외교적 노력 등을 계획하였다. 반면 북한 단독 수교국들에 대한 목표는 “아국과의 관계 개선 또는 수교”였다. 소련, 중공⁹⁾ 및 동구권 국가들에 대해서는 교차승인 여건을 조성하며, 경제·문화·체육분야 교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3세계 ‘친북’국가들에 대해서는 방한 초청을 포함하여 직접·간접 및 공식·비공식 접촉과 교류를 추진하고, 필요시 국교수립을 조건으로 원조 내지 경제협력을 제공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군소 친북국가들과는 ‘선(先)수교 후(後)경협’ 조건 하에 다변적 접촉 및 교류 원칙을 마련하였다.¹⁰⁾ 이처럼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원조정책과 대북한 경쟁구도는 밀접한 연관성을 띠는 것으로 이해된다. 1981년 무상원조 공여 계획안에 따르면, 총 100여국에 3,660만 달러를 상정하였다.¹¹⁾ 이 가운데 중남미의 경우, 1980년도 무상

8) 외무부 북미과, 위의 문서.

9) 당시 사용하던 ‘중공’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 외무부 북미과, 위의 문서.

11) 추가 예산을 포함하여 1981년 공여 실적은 42개국 대상, 397만 달러였다. 이전 연도에 비해 대북

원조 대상국은 8개국에 60만 달러였으며, 이듬해에는 10개국에 총 120만 달러로 증대되었다. 중남미 개도국에 대한 무상원조의 목적에는 명백하게 대북 경쟁의식이 가미되었다. 이들에 대한 ‘원조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 중 “북괴 침투활동 견제”, “비동맹 등 국제회의에서 아국 지지 유도”, “북괴 수교 교섭 저지”¹²⁾ 등의 목적이 포함됨으로써 무상원조를 매개로 한 제3세계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한국 지지와 북한의 영향력 차단이라는 적극적 연계전략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에 대한 원조품 내역은 주로 경운기, 버스, 재봉기, 의약품, 승용차, 조업기구 등이었다.

외무부 공개자료를 통해 볼 때, 제3세계 특히 중남미지역 공관들의 경우, 남북 대비 영향력 추세 등과 같은 현황 분석에 치중했으며, 남북 외교경쟁 구도에 입각한 대응방안 마련에 적극적이었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 과거 중남미지역은 한국을 지지해온 ‘표밭’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했으나 점차 북한의 외교력이 거세지기 시작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던 상황이었다. 당시 외무부는 중남미지역에서 탈(脫)미국, 독자노선의 지향 및 비동맹 추구 경향, 카리브 제국의 좌경화 성향이 증대하고 있었으며, 역내 일부 국가의 정치 불안 현상과 더불어 특히 북한이 1979년 하바나 회의에서 비동맹 조정 위원국의 지위를 획득한 이래 대(對) 중남미 집중 침투 책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북한은 1979년 4개국(그레나다, 니카라과, 세인트루시아, 영국령 도미니카)과 수교했으며, 자메이카에 상주 공관을 설치하였고, 12개국에 31회의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듬해에도 북한은 멕시코와 수교, 니카라과에 상주공관을 설치하고, 9월까지 9개국에 10개의 사절을 파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각종 적극적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즉 ‘수교 공작을 위한 대상국별 대책’, ‘북괴 수교 저지 대상국별 대책’, ‘북괴의

늘어난 수치이다. 참고로 1977년 14개국 110만 달러, 1978년 19개국 134만 달러, 1979년 26개국 310만 달러, 1980년 28개국 297만 달러 등이다.

12)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무상원조 관계자료 요청.”(6월 27일자, 문서번호: 경이762-193), 1980.

대아국 단교책동 대상국별 대책’, ‘아국의 대북외 단교공작 대상국별 대책’, ‘북외의 상주공관 설치 저지 대상국별 대책’ 등으로 구분하여 각국별 대책을 세웠다. 각국별 공통적인 대책은 대체로 고위 사절단의 파견, 친한단체 육성 및 활동 강화, 대주재국 홍보·문화활동 적극 추진, 주재국과의 실질협력사업 파악 등으로 요약된다. ‘한국의 밤’ 등 문화행사를 열고 주재국과의 통상 및 경험을 증진하며, 자원 확보 외교를 강화함으로써 주재국 외무성 및 관계 요인과의 유대를 강화해나가고 유력인사의 방한초청을 추진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나갔다.¹³⁾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외교문서에 의하면, 외무장관의 중남미 순례, 카리브지역의 외교망 확충, 북한을 수세로 몰기 위해 쿠바와의 각종 교류 적극 증진, 중남미 국가와의 자원협력 증진, 대 중남미 경제협력 및 통상 증진, 미주지역 기구(OAS, IBD, CARICOM 등)에 가입, 중남미 요인 확보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¹⁴⁾

당시 외무부는 중미 카리브해 소국가군 9개국들 가운데 유엔 회원국 및 비동맹국들의 경우, 남북 동시수교의 경향을 띠었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비동맹의 경우는 동시 수교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들 지역의 특징으로 지도자 개인의 성향에 크게 좌우되지만 경제적 곤란 때문에 외국 원조에 민감한 반응을 보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하였다. 첫째, 경제·기술 원조의 강화이다. 특히 유엔 또는 비동맹 가입국가 중 남한 단독 수교국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솔로몬, 지브티, 도미니카연방, 안티구아 등이다. 유엔 및 비동맹 미가입국으로 아국 단독 수교국들(키리바시, 나우루, 투발루, 통가)은 다음 순위였다. 둘째, 동시 미수교국(트리니다드 토바고, 벨리세, 바하마)에 대한 현상유지 정책이다. 특히 북한의 동향을 주시해가며 필요시 가급적 선제 수교를 추구하였다. 셋째, 친한 유력인사의 확보이다. 주요 인사에 대한 초청을 강화하고, 정보 제공을 위한 채널을 구축하며, 명예

영사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넷째, 각국 유엔 대표부와의 접촉 강화이다. 다섯째, 남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특별대책으로서 (1) 단독 수교국에 대하여는 실질적 이득이 있음을 실감할 정도로 상당한 경제원조를 시행하며(특히 솔로몬에 역점), (2) 호주, 뉴질랜드는 남태평양에 대한 소련과 그 동조세력 진출에 민감한 만큼 이들과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대북한 저지에 영향력 행사를 요청하고, (3) 바누아투의 대북한 수교의 재고를 촉구하고 아그레망 및 신임장 제정을 저지하는 것이다. 여섯째, 우방국의 협조를 획득한다. 남태평양 지역은 호주, 뉴질랜드에, 카리브지역은 영국과 미국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안이다.¹⁵⁾ 결국 1980년대 초 한국의 제3세계 외교는 남북 외교대결의 관점에서 ‘세(勢) 우위’의 견지와 북한의 반한책동 분쇄를 적극 추진했다는 점에서 ‘안보외교’의 성향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대책들이 성과적인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특히 남북 외교경쟁의 주대상인 최소국의 지지 확보가 필요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이는 1980년대 경제 도약을 위한 자원 확보선의 다변화와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중요성이 점증되는 사정과 관련이 있었다.¹⁶⁾

한편 당시 한국 정부 내에서 제3세계 외교 전략을 둘러싼 일정한 이견이 있었음도 확인된다. 제3세계를 대상으로 한 남북간의 소모적인 대결외교 노선에 대한 일정한 문제의식은 다음 사례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1981년 12월 3일, 남북한 단독 수교국에 대한 외교방침 결정에 관한 회의가 외무부 제1차관보 주제로 이장춘 정무 제1비서관, 이상열 안기부 제3국장과 외무부 각 지역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남북한 수교국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되었다. 이상열 국장은 남북한 대결적 관점에서 사우디를 중요국가군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특히 상대국들에 대한 경제협력 수단과 민간상사를 동원한 정부와

13) 외무부 남미담당관실, “對중남미 외교대책.”(등록번호: 7527, 분류번호: 721.1), 1981.

14) 외무부, “북외의 중남미 침투 추세 및 대책.”, 1981.

15) 외무부, “남태평양 및 카리브해 小島嶼국가 현황.”(등록번호: 9511, 분류번호: 721.1), 1981.

16) 외무부 북미과, 앞의 보고서 참조.

안기부의 역할 분담까지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가 외교적으로 북한에 비해 우세하다고 판단되어 이니셔티브를 쥐고 북한 수교책동을 무시할 때”까지 남북 외교경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이장춘은 “무상원조까지 하면서 한 표라도 획득하자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원칙적인 자세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다소 회의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같은 의견은 “1973년 WHO(세계보건기구) 회의 이래 8년 반 동안 남북한 관계의 발전과 국제상의 무대에서 대결에 관하여 재고해야 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양자간 의견 대립은 곧 해소된 것으로 보이지만¹⁷⁾ 전두환 군사정권 초기였던 1980년대 초, 권위주의적 통치체제 내에서 남북대결 외교노선을 둘러싼 일정한 문제의식의 표출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III. 북한의 비동맹운동 및 군사외교

1955년 반동회의로부터 시작된 비동맹대회는 3년마다 열리는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정상회의 개최 직전과 전년도에 열리는 전체 외상회의, 매년 열리는 조정위원회 외상회의 등이 있다. 그리고 국제연합 주재 조정위 및 전체 대사급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국제여론을 형성하고 유도하기에 충분할 만큼 빈번한 모임을 가져왔다.¹⁸⁾ 북한은 이 비동맹회의를 국제사회에서 반한(反韓) 여론 형성의 거점으로 활용하였다. 1970년 잠비아 루사카 제3차 비동맹 정상회의 이후부터 줄곧 한국문제가 공식 의제로 채택, 논의되어 왔고,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주한 외국군사기지 철수, 정전협정 폐기와 평화협정으

17) 이같은 인식의 차이는 “본안에 대하여 안기부와 이장춘 비서관은 공히 이론 없다 합니다”라는 정무차관보의 12월 9일자 자필 ‘보고문’을 통해 확인된다. 이 문서는 거꾸로 이견 발생 사실을 명확히 확인해주고 있다.

18) 서계만, 앞의 논문, 1988, p. 157~160 참조.

로의 대체, 북한식 평화통일 지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친북한적인 결의를 거듭하였으며, 1975년 8월 페루 리마 비동맹국 외상회의에서는 북한의 단독 가입이 수락되었다. 또한 같은 해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이같은 흐름이 반영되어, 유엔 최초로 한국문제에 관한 공산측 결의안이 통과되는 이변을 낳기도 하였다. 1976년 9월 제5차 콜롬보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단독가입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1979년 9월에는 조정위원국으로 선출되는 등 1970년대를 경과하면서 북한의 영향력은 점차 강력해진 반면 한국문제에 관한 결의는 늘 반한적이었다.

1980년대 초, 북한은 비동맹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면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였다. 일련의 비동맹 국제행사들을 치르면서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투자를 감수하였다. 북한은 뉴델리 비동맹 외상회의(1981. 2)에서의 결정에 따라 같은 해 6월 10~12일간 ‘비동맹 식량 및 농업분야 조정국회의’와 8월말 ‘식량 및 농산물 증산에 관한 비동맹·개도국 심포지엄’을 평양에서 개최하였다. 제5차 콜롬보 정상회의, 제6차 하바나 정상회의 및 뉴델리 외상회의는 비동맹국들의 관심분야인 20여 개의 경험분야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조정국(coordinator)을 지정하였는데, 북한은 당초 하바나 결의에서 2개 분야(식량 및 농업, 여성의 역할)의 조정국이었으나 뉴델리 회의에서 3개 분야(과학기술 개발, 어업, 보건)의 추가 조정국으로 선정되었다. 북한이 점차 비동맹 국가군에서 영향력을 발휘해나가는 과정에서 양대 회의를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회의 참가자 전원의 체재비 부담을 제외함으로써 다수의 참가를 끌어내려는 적극성을 보였다.

위와 같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한국 외무부는 비동맹 회원국에 주재하는 42개 재외공관에게 대표단 초청 등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도록 지시함과 동시에 한국의 식량 및 농업분야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각종 책자를 주재국 관계 요로에 배포할 것을 지시하였다. 외무부의 이같은 대응전략은 평양회의의 결과를 최대한 “중성화(Neutralize)”시키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¹⁹⁾

또한 참가 예정국들을 대상으로 “참가를 재고토록 적절한 방법으로 설득”할 것을 지시하였다. 여기에는 10월 중순에 열릴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 재건기구)²⁰⁾ 제7차 서울 총회를 의식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¹⁾

제2차 비동맹 식량 및 농업분야 조정국 평양회의에는 조정국 중 8개국과 여타 비동맹 회원국 중 8개국 등 북한을 포함해 총 17개국 대표와 유엔 FAO(식량농업기구) 대표가 참가하였다. 외무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회의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측이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바로 회의 규모, 즉 회의 참가국 숫자였다.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성과없이 폐막되었다”는 단순하고 부정적인 평가인 반면 회의 참가국 명단은 자세하게 첨부함으로써 남측의 관심사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외무부는 평양회의에 참가한 인도인으로부터 참가 보고서를 입수하여 회의 전반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을 포함한 조정국 9개국, 비동맹국 7개국과 기타 PLO, FAO에서 참가한 것으로 돼있다. 보고서는 중공의 UNDP(유엔개발계획), FAO 관련 중요 정보와 평양 회의의 내용이 상세히 소개된 것은 물론 북한-FAO 관계 각종 사업현황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²²⁾

또한 외무부는 8월에 평양에서 열릴 ‘농산물 증산 심포지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해외공관에 적극적인 활동을 시달하였다. 그 결과 평양 심포지움에 아프리카 제국 인사들의 초치를 위하여 항공편(탄자니아 출발 추정 전세기)을 제공한다는 북한 외상 명의의 초청장을 전달한 사실을 파악하였다.²³⁾ 이후 실제로 북한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 민항 전세기 3대를

19) 외무부, “보고사항: 평양 개최, 제2차 비동맹 식량, 농업분야 조정국회의 결과 보고.”(6월 15일자, 관리번호: 1718/81, 수신: 대통령 각하, 국무총리), 1981.

20) 1962년 설립, 1981년 현재 아시아 16개국, 아프리카 12개국이 가입되었으며 한국은 부의장국이었다. 농수산부, “제7차 AARRO 총회 준비를 위한 협조요청.”(3월 9일자, 수신: 외무부장관), 1981. 첨부문서 ‘제7차 AARRO 총회 준비자료’ 참조.

21) 외무부 국제연합과, “비동맹 식량, 농업분야 조정국회의, 식량 및 농산물 증산에 관한 비동맹-개도국 Symposium 대책.”(5월 7일자, 관리번호: 1458/81), 1981.

22) 주이태리 대사관, “제2차 비동맹 식량 농업 조정국회의.”(8월 17일자, 관리번호: 81-2787), 1981.

23) 외무부, “작성전보.”(7월 29일자, 관리번호: 12931/81, 발신: 주 우간다 대사, 수신: 장관), 1981.

제공, 각 지역별로 일정 지점에 집결한 대표단을 평양으로 집단 수송하였다. 이외에도 일부 국제기구 사무총장에게는 특별 전세기를 제공하였으며, 전세기를 이용치 못한 대표단에게는 왕복 여비를 사전 제공하였다. 이처럼 항공료 외에 체제비, 연회비, 접대비,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평양 심포지움에 최소한 200만 달러 이상의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었다.²⁴⁾ 또한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경까지 북한은 부주석 박성철, 총리 이종욱, 부총리 정준기, 당 비서 윤기복, 쿠바 주재 대사 이인춘, 페루 주재 통상대표부 대표 김찬식 일행 등 핵심급 간부들을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파견하여 참가를 독려했다.²⁵⁾ 이를 통해 볼 때, 북한이 이 행사에 상당한 국제정치적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짐작된다. 김일성은 심포지움 참석차 방문한 각국 대표들을 접견하였으며, 북한 당국은 만찬장에서의 김일성 연설문을 광고로 제작, 인도 공산당 기관지에 게재하는 등 국제정치적 영향력 확산에 주력하였다.²⁶⁾ 이와 관련해 북한이 심포지움 개막 당일 미 SR-71 정찰기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사실에 대해 한국 외무부는 북한의 정치군사적 의도를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그리고 비동맹 국가들을 상대로 “미국의 북침 전쟁위협을 부각시켜 선전하려는 북한 지도층내 강경파의 극적인 시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²⁷⁾ 또한 행사에 참가한 일부 대표들을 9·9절 행사까지 체류케 하여 북한의 선전활동에 활용한 사실에도 주목하였다.²⁸⁾

24) 외무부, “보고사항: 북괴 주취”식량 및 농산물 증산에 관한 비동맹 개도국 심포지움.”(관리번호: 81-2768, 수신: 대통령 각하), 1981.

25) 외무부, “식량농업증진 비동맹개도국 심포지움 개최(평양, 8.26-31).”(8월 25일자), 1981.

26) 외무부, “8월 31일자 작성전보, 수신: 장관, 발신: 주 인도대사.”, 1981.

27) 외무부, “보고사항, 북괴 주취”식량 및 농산물 증산에 관한 비동맹 개도국 심포지움.”(관리번호: 81-2768, 수신: 대통령 각하), 1981.

이 사건은 미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노선이 1979년 계속 주둔으로 바뀌어나가고 1981년 2월 레이건 취임 직후 한미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철수 백지화와 한국군 현대화 지원 및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 재확인 등으로 이어지자 이에 대한 반미감정의 공격적 표출이라는 포괄적 배경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전인영, “북한의 외교정책: 지속과 변화.”, 『아세아연구』 제81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89, p. 63.

28) 외무부 국제연합과, “북괴 주취”식량 및 농산물 증산에 관한 비동맹 개도국 심포지움 결과.”(9월 9일자, 관리번호: 81-3127), 1981.

외무부는 평양 심포지엄에 참가 결정한 국가들에 대해서도 “중성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새마을운동 등 홍보 책자를 활용하여 각 주재국을 최대한 중립화시키도록 지시하였다.²⁹⁾ 또한 참가국의 방북효과 상쇄를 위해 체재비 부담을 조건으로 한 방한외교를 추진하였다. 한 예로, 평양 심포지엄 참석 후 중공·일본을 거쳐 한국 방문을 희망하던 방글라데시 농림부 장관·차관 일행이 체재비 부담을 요청하자 이를 주재국 대사가 외무부에 의뢰하였다. 방글라데시 주재 한국대사는 이 요청 전문에서 “방북 직후 방한시키므로 방북효과 상쇄 등의 효과가 클 것”임으로 꼭 실현되도록 적극 건의하였다.³⁰⁾ 방북효과 상쇄를 위한 경쟁적 방한 외교의 전형이라고 할만하다.

평양 심포지엄은 80여개국 및 12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여 비동맹 및 기타 개도국의 농업분야 경험과 식량증산 방법, 식량농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문제, 식량문제와 국제 신경제질서 등의 의제를 채택하였다.³¹⁾ 특히 8월 31일 ‘식량 및 농업에 관한 평양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비동맹국들은 이 선언에서 식량자급체제의 확립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협력강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한편 선진국이 식량을 정치적·경제적인 외교압력에 이용하고 있다고 격렬히 비판하였으며, 선진국에의 식량의존으로부터 탈피하여 진정한 정치적 독립을 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³²⁾ 한편 외무부는 심포지엄 후 각 해외공관 등을 통해 최종 탐문한 결과, 77개국 대표 및 FAO 등 12개 국제기구로부터 약 300명의 대표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였다.³³⁾ 또한 북한이 심포지엄을 구실로 중남미 및 아프리카의 한국 단독 수교국들에 대한 참가를 종용함으로써 통상대표부 설치 내지는 외교관계 수립 등을 위한

29) 외무부 국제연합과, “비동맹 개도국 농작물 증산에 관한 심포지엄 참가국 현황.”(1981년 7월 31일자, 문서번호: 국연731), 1981.

30) 외무부, “착신전보, 주재국 농림성 장관 방한 초청.”(1981년 6월 29일자, 관리번호: 2087/81, 수신: 장관, 발신: 방글라데시 대사), 1981.

31) 외무부, “착신전보, 북괴 프레스 릴리스.”(8월 28일자, 수신: 장관, 발신: 주 유엔대사), 1981.

32) 외무부, “착신전보, 비동맹식량회의.”(9월 1일자, 수신: 장관, 발신: 주일대사), 1981.

33) 외무부 국제연합과, “북괴 주최 ‘식량 및 농산물 증산에 관한 비동맹 개도국 심포지엄’ 결과.”(9월 9일자, 관리번호: 81-3127), 1981. 첨부 보고서 참조.

계기로 삼으려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³⁴⁾ 그에 따라 심포지엄 종료 후 각국 대표단이 귀국하는대로 “자연스러운 기회를 이용, 접촉”하여 “회의 내용과 분위기, 결과 평가 및 회의문서와 참고사항(특히 참가 대표 명단, 참석국가 및 인원수 등 포함), 북괴 방문 인상 및 농업실태에 관한 자료” 등의 사항에 대해 조사, 보고할 것을 38개 주재공관에 일제히 지시하였다.³⁵⁾ 그 결과 평양 심포지엄에 관한 포괄적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시 49개 해외공관에 배포하였다. 이 결과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심포지엄 개최 저의를 “이후 각급 비동맹회의에 대비한 환경 조성”과 “초당 외교를 통한 수교 책동” 등으로 규정하였다. 즉, 당시 비동맹운동이 실리 위주의 경제문제 해결 우선으로 변화되어 가는 전반적 추세 속에서, 과거 정치투쟁 일변도의 인상을 불식시키고, 비정치 분야에서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비동맹 내에서의 지위를 제고시키는 동시에 이듬해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였다.³⁶⁾

1980년대 초 북한의 제3세계 외교전략의 또 다른 한 축은 ‘군사외교’라고 할 수 있다.³⁷⁾ 이미 북한은 1966년 월남전 당시 심리전 요원 250~300명과 조종사 50여 명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1981년 8월 현재까지 6천여 명에 달하는 군사요원을 분쟁국가들에 파견하였다. 1981년 8월 비동맹국 짐바브웨에 군사고문단 120명을 파견, 정부군 훈련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 정규군 및 게릴라들을 불러들여 훈련시켰는데, 교육과정은 게릴라 훈련, 조종사 훈련, 일반 군사훈련 등이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자체 무기 생산능력이

34) 외무부, “보고사항, 북괴 주최 ‘식량 및 농산물 증산에 관한 비동맹 개도국 심포지엄.’”(관리번호: 81-2768, 수신: 대통령 각하), 1981.

35) 외무부, “발신전보, 식량, 농업 증산 비동맹 개도국 심포지엄.”(9월 3일자, 관리번호: 81-2822), 1981.

36) 외무부 국제연합과, 앞의 문서(9월 9일자, 관리번호: 81-3127) 참조.

37) 북한의 제3세계 군사외교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박재규, “북한의 제3세계 군사외교정책.” 『남북한 정치통합과 국제관계』,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6. 이 논문은 북한의 제3세계 군사외교를 유형별로 군사요원의 파견, 군사요원 초치훈련, 군사장비 지원 그리고 폭력혁명 수출 등 4가지로 나누어 서술한 점이 특징이다.

높아짐에 따라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등지로 지원대상 국가를 확대해 가는 추세를 보였다. 대상지는 1970년대 이후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28개국에 달하였다. 1974년 이후에는 점차 정치적 지지기반을 넓힐 목적으로 말라가시 등 분쟁국에게 소량을 무상으로 지원한 반면 파키스탄, 시리아, 자이레, 리비아, 이집트 등에는 현금판매 또는 피지원국의 광물 등 자원상황을 조건으로 하는 차관형식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1980년 9월 전면전에 돌입한 이란-이라크 전쟁시, 북한은 이란측에 소화기, 야포, 전차 등 각종 군사물자를 대량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북한의 해외 무기지원정책은 군사혁명 및 비동맹운동에서의 지도적 지원 등 정치적 목적과 병기 수출시장의 확대에 의한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³⁸⁾

또한 북한은 1974년부터 아프리카에 무기 수출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여 1978년 이후 급증 추세를 보였다. 1979년 리비아와 1억불 이상, 이집트와 1,200만불 상당의 무기판매에 합의한 데 이어 1980년에 리비아와 2억불 이상, 1981년에는 짐바브웨와 2,270만불 상당의 대규모 무기판매에 합의하는 등 무기수출에 치중하였다. 북한의 대아프리카 무기수출국은 총 18개국에 달하였다. 동시에 북한은 군사요원의 해외 파견과 초치 등 적극적인 인적 군사교류도 병행하였다. 군사요원의 해외파견 임무는 참전, 미지원국 군대의 장비 및 부대 운영, 훈련지도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명목으로 1970년대말 말라가시, 리비아, 알제리 등지에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의 조종사 및 공군 요원을 파견한 바 있다. 훈련지도 명목으로 1970년대 중반까지 3개국 250여 명의 격술(태권도) 교관을 파견하였는데 70년대 후반에 들어서 80년대 초까지 16개국에 걸쳐 1,750여 명으로 급격히 확대하였다. 또한 북한은 1960년대 중반부터 아프리카지역의 반정부 게릴라 요원들을 초청하여 단기(3~6개월) 또는 장기(1년 6개월 가량)로 게릴라 훈련을 이수토록 하였

38) 중미과동아프리카과서구1과, “북괴의 반정부 활동 및 게릴라 지원실태.” 『북한의 대외관계 활동, 1981』 (등록번호: 25170, 분류번호: 725.1), 1981.

으며, 1981년까지 11개국 및 단체의 게릴라 요원 1천여 명을 배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규군 요원의 경우, 1971년부터 시작하여 1980년까지 7개국에서 입북, 훈련을 마치고 귀국하였으며, 1981년에 들어 보다 적극화하여 우간다, 짐바브웨, 탄자니아 등 3개국 군사요원 300여 명이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하였다.³⁹⁾ 사실상 북한은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제3세계 전반을 대상으로 활발한 군사외교 활동을 전개하였으며,⁴⁰⁾ 특히 1981~1982년의 경우, 1970년대 중반 이후 10여년간 중 가장 많은 초청 및 방문 외교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⁴¹⁾

이와 같은 북한의 적극적인 군사외교 노선은 과거 중소 일변도의 대외정책에서 벗어나 제3세계를 대상으로 자주노선의 강화를 꾀하며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려는 전략적 사고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북한 내에서의 김일성-김정일 권력 승계문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의 획득과 비동맹운동의 주도권 장악 등과 같은 목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군사외교의 경제적 가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 북한은 중소 원조에 의해 구축해 놓은 군수산업용 각종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제3세계에 수출하여 경제의 활력을 꾀할 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증진시켜나가고자 하였다. 수출 대상국의 군 엘리트에 대한 훈련지도, 초치훈련 등을 통해 미래의 파워 엘리트들과 친분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장기적인 외교적 실익을 도모할 수도 있었다.⁴²⁾ 무엇보다 북한이 제3세계 외교를 강화하게 된 배경에는 국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전쟁에서의 미국의 패퇴, 인도차이나반도의 공산화, 중소 내정의 불안과 집권층의 교체,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 및 제3세계 국가간의 반목과 대립의 격화 등이 북한의 제3세계 외교정책

39) 중미과동아프리카과서구1과, “북괴의 대 아프리카 군사지원 실적.” 위 문서군.

40) 19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까지 군사요원 파견과 초치, 무기 및 장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박재규, 앞의 논문, 1986, p. 131~134. <표>1~4 참조.

41) 유석렬, 앞의 논문, 1986, p. 51. <표1> 참조.

42) 박재규, “북한의 대 제3세계 군사외교정책.” 『한국정치학회보』 제16집, 한국정치학회, 1982, p. 195.

변화에 영향을 준 요소들이었다.⁴³⁾

IV. 신냉전기 한국 외교의 선택과 갈등

1. 북한 제압과 한국문제 논의 회피

1979년 10·26사건이 발생하자 북한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남한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남북대화 채널의 복원을 꾀하였다. 북한의 주 유엔대사 한시해는 11월 6일 유엔 사무총장을 방문하여 남북대화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11월 9일자 『로동신문』 사설에서는 남북대화 재개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11월 20일, 30개 해외 공관장을 평양으로 소환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북한측의 긴박한 움직임에 대해 남한 외무부는 전 재외공관에 훈령하여 비상사태와 관련한 북한의 대외 동향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즉각 보고할 것과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대외활동 강화에 대응하여 ‘대북외 제압 외교활동’을 한층 적극 전개토록 조치하였다.⁴⁴⁾

1980대 초는 한국의 정치권력 재편기였으며 제한적으로나마 남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북한은 1980년 1월 김일 및 이종욱 정무원 총리 명의로 된 편지를 이희성 참모총장 등 11인과 신현확 총리에게 보내 남북정치협상회의 및 남북당국자회담을 위한 의견교환을 제의하였다. 이후 남북은 9월까지 진행된 ‘총리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을 통해 상대방의 의중과 정국의 변화를 엿보고자 하였다. 전두환 등 신군부는 국내 정치권력의 안정화를 위해 남북대화에 호응함으로써 현상유지를 추구하였다. 반면 북한의 대남공세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1980년 10월 북한은 제6차 당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제의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해외 주재 공관을 동원해 연방제 통일노선을 적극 선전하였다. 현지 언론 등과의 대담 등을 통해 ‘남한에 공산주의를 강요하지 않는다’, ‘연방제 하에서 남한 내 외국인 자본은 계속 보장될 것’ 등의 논리로 연방제 방안의 정당성을 역설해나갔다. 이 시기 북한의 대남 전략은 제한적인 남북대화를 통해 요동치는 남한 정국의 변화를 탐문하고 정형화된 통일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맞서 전두환 정권은 1981년 1월 12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했으며, 이듬해 1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⁴⁵⁾ 전정권은 남북정상회담 제의를 통해 대북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국내정치적으로 결여된 정통성을 전향적인 대북 관계개선으로 충족해보려는 단순한 보상심리일 뿐이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전정권을 대화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였다. 유엔 북한대사 한시해 역시 6·5 제의 접수 거부 의 뜻을 명백히 하였다.⁴⁶⁾ 같은 해 9월 초, 북한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목타르(Mochtar) 외상이 김일성을 만났을 때, 1·21 제의에 대한 김일성의 견해를 묻자 “남한이 책임을 져야하며⁴⁷⁾,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Good idea and sincere proposal, but still has blood on his hand)”라고 답변하였다.⁴⁸⁾ 이같은 북한의 입장은 1981년 8월 6일, 북한의 정당·사회단체들에 의한 ‘민족통일촉진대회’ 개최 주장시 “전두환 일당을 제외한 누구와도 대화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라고 한 데서 이미 확인된다.⁴⁹⁾ 북한은 전두환 정권을 무시하였으며 그같은 자세는 결국 1983년 10월 량군사태라는

43) 김태환, “북한의 제3세계 외교정책의 전략이념,” 『북한』 3월호, 1987, p. 166.

44) 외무부 보고사항, “북외 공관장회의 개최.”(11월 20일자, 관리번호: 79-2570, 수신: 대통령각하 권한대행), 1979.

45) 노중선 엮음, 『연표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 서울: 사계절, 1986, p. 220~223.

46) 외무부 정무1(외교안보), “대통령 각하 6.5제의에 대한 반응.”(1981년 6월 9일자), 1981.

47)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 목타르 외상 면담 수기 원문과 보고문에는 “남한 당국자는 광주사태에 책임져야 하며”라고 기술했으나 최종 정식 보고서(아래의 착신전보)에서는 ‘당국자’와 ‘광주사태’라는 표현이 빠져 있다.

48) 외무부, “착신전보, 인니 외상 북외 방문결과.”(9월 20일자, 관리번호: 81-1619), 1981.

49) 국토통일원 편, 『남북한통일체의자료총람』 제2권(1975.1.1~1985.12.31), 1985, p. 751(노동신문, 1981년 8월 7일자).

극단적 대응으로 나타났다.

전두환의 1·21 및 6·5제의 직후, 외무부에서 생산된 보고서들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각하의 제의 실천을 위한” 선전 지침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즉, 각국의 반응과 지지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공관별 조치 사항을 지시하는 등과 같은 업무가 반복되었다. 또한 6월말~7월초에 있는 전두환의 아세안 각국 방문시, 공동성명에 6·5제의 지지를 요청함으로써 남북간 주도권 경쟁의식을 개입시켰다. 국내 정치상의 필요성과 연계된 남북관계 주도권 장악을 위해 외교 역량이 소모적으로 낭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1981년 2월 뉴델리에서 열린 ‘비동맹국 외상회의’에서 벌어진 남북한의 외교경쟁 또한 주목된다. 당시 한국 외교의 목표는 ‘한국문제 불거론’과 ‘한국 조항 불포함’이었다. 외무부는 각국 주재공관에 훈령을 보내어 외상회의의 각 단계별 유념사항을 전달하고, 교섭시 ‘설득력 있는’ 발언과 논리의 유형들을 제시하여 전달하였다. 유형 A는 ‘자주적 해결원칙’의 강조이다. 남북한은 이미 1972년 7·4공동성명을 통해 자주적 해결 원칙에 상호 합의한 바가 있다는 것이며, 비동맹의 주요 원칙인 내정 불간섭 및 민족자결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논리이다. 유형 B는 ‘당사자 합의 및 당사자 참여 원칙’의 강조이다. 비동맹회의에서 한국문제 토의의 선행조건은 남북한이 비동맹회의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먼저 합의해야 하고, 또 남북한이 공히 한국문제 토의에 참여하여 각기의 입장을 밝힐 수 있어야 하는데, 위의 조건 중 하나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동맹회의의 한국문제 토의는 무용하고 비생산적이라는 논리이다. 유형 C는 비동맹 내부의 분열적, 대립적 문제의 토의를 지양하고 비동맹의 단결과 연대성을 제고하는 문제에 역점을 두는 입장이 건설적이며 적절한 것이라는 논리이다.⁵⁰⁾ 위와 같은 유형들은 신냉전기 한국 정부가 비동맹회의에서 어떤 논리와 근거로 한국문제에 관한 논의를 회피하고자 했

50) 외무부 국제기구국, “비동맹 외상회의의 대책 관계자료.”, 1981. 별첨자료 ‘뉴델리회의의 대비 구체적 교섭 요령 하달’ 참조.

는지 잘 보여준다.

2. 한국 외교의 명분과 실제의 부조응: ‘친선’과 ‘반공’의 이중성

냉전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외교활동에 대한 방해와 차단이 자국 외교활동의 유익이자 승리라는 제로섬(zero-sum) 게임과 같은 인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같은 사례들이 이 시기 외교문서에서 발견된다. 1981년 3월 북한 예술단의 말레이시아 공연 추진 움직임이 일자, 주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은 말레이시아 당국을 상대로 방해 활동에 돌입하였다. 북한측이 주재국 고위층과 접촉하여 정치적인 결단을 얻으려고 기도할 것으로 보고, 주재국 당국에 북한 예술의 본질을 설명함으로써 경계심을 고취시켜 수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계속 예의주시하고 저지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주말레이시아 대사의 보고가 이를 방증한다.⁵¹⁾

또한 북한이 주최하는 주체사상 세미나에 말레이시아인들의 참석을 막기 위한 노력도 전개하였다.⁵²⁾ 같은 해 4월, 북한이 태국에 상주 공관을 설치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 또한 같은 맥락이다. 평양 행사에 초청된 각국 인사들의 참가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도 확인된다. 북한은 1981년 10월 20~25일 평양에서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연맹(사로청) 제7차 대회를 개최하였다. 북한이 항공료 및 체재비 부담을 조건으로 각국 청년단체 대표에 대한 초청사업을 적극 전개해나가자, 노신영 외무부장관은 전체 공관장들에게 “북괴 초청책동 여부를 확인 보고 바라며, 가능한 한 피초청자들의 북괴 방문을 저지하고 결과 보고 바람”이라는 지시를 내렸다.⁵³⁾ 따라서 각 주재국 공관에서는 방북 인사들의 반응을 보고함으로써 방북자들에 대한 사

51) 외무부, “착신전보, 북괴 가무단.”(3월 5일자, 관리번호: 81-201), 1981.

52) 외무부, “착신전보, 주체사상 세미나.”(4월 30일자, 관리번호: 81-289), 1981.

53) 외무부, “발신전보, 사노청 7차 회의.”(10월 7일자, 관리번호: 81-2253), 1981.

후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대통령 보고문서에 따르면, 외무부가 이 대회에 특히 긴장했던 이유는, 북한이 제3세계 각국의 인사들과 기타 지역의 친북단체 인사를 대상으로 하여 항공료 및 체재비 등의 일체 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초청장을 은밀히 발송, 대규모 회의의 개최를 준비해나갔기 때문이다. 또한 10년 만에 사로청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김정일의 확고한 후계체제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동시에 김정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데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북한의 대규모 초청 외교는 한국 외무부의 경쟁의식을 자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같은 북한의 노력이 북한체제의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대응을 취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에 따라 행사 참가국 숫자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행사기간 초기에 외무부가 전체 공관을 통해 확인한 대회 참가국 수는 18개국에 불과하지만 북한 방송 청취록에 따른 집계로는 86개국이었다.⁵⁴⁾ 행사가 끝난 직후인 10월 28일자 외무부 문서에서는, 총 130개국에서 184개의 대표단을 초청함으로써 일시적 행사로 입북한 외국 대표단의 규모로는 역대 최대 행사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⁵⁵⁾ 지역별로는, 중동 및 아프리카가 59개국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주 31개국, 서구 15개국, 공산권 14개국, 아시아 11개국 등이었다. 미주지역에서도 미수교국(21개국)을 포함, 31개 국가의 청년단체들이 대거 참석함으로써 북한이 외교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였다. 130개국 중 정부 및 집권당의 공식대표를 파견한 국가는 65개국이었다. 결과적으로 외무부는 사로청 7차대회를 통해 북한이 내적으로 김정일 후계체제를 표면화시킴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 외교역량을 과시하고 국제적 반한투쟁을 위한 국제 청년조직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54) 외무부, “보고사항,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사노청) 제7차대회 개최.”(10월 19일자, 관리번호: 81-2410), 1981. 첨부문서 참조.

55) 북한에서도 130여개 나라 대표들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하였다. 국토통일원 편, 앞의 책, 1985, p. 787(노동신문 1981년 10월 24일자).

평가하였다.⁵⁶⁾

한국 또한 제3세계를 대상으로 적극적 방문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1981년 12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열린 제2차 비동맹·개도국 노동장관 회의에 권중동 노동부장관 등 7명의 대표단이 파견되었다. 이 회의에는 50개 비동맹 회원국과 한국을 비롯한 4개 개도국 및 ILO 등 6개 국제기구에서 220여 명이 참가하였다. 한국의 비동맹 외교 목적은 비동맹국들과의 관계 개선 및 북한의 영향력 차단이었다. 정부 대표단에 대한 기본훈령에 의하면, 회의 참가의 목적은 무엇보다 비동맹 주관회의에 정식 초청되어 참여하는 최초의 사례이므로 비동맹 제국과의 연대감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있다. 동시에 북한의 비동맹 내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대남 비방 증상 및 대이라크 책동 가능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북한에 대한 세부적 지침에 의하면 ‘회의 기간 중 북괴는 아국의 노동 실태 등 국내문제를 언급하여 비방 증상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등 반한 책동을 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그 경우 답변권 행사 등 적극 대처하는 동시에, 의장단 및 우방 비동맹국 등과 사전 협조하여 타국 비방 등 회의 본질과 관계없는 내용의 발언은 봉쇄 또는 중단시키는 방법을 강구토록’할 것을 지시하였다.⁵⁷⁾ 훈령의 대부분이 북한의 반한정책 저지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의 대비 참고자료 중 ‘비동맹 회원국(97개국) 성향 분석’ 표에 의하면, 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서구 및 기타로 구분하여 각 나라들을 친한(38개국), 중립(23개국), 친공(36개국)으로 분류하였다. 비동맹 조정위원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경우, 중립(10개국), 친북(15개국)에 비해 친한은 8개국에 그쳐 세 열세의 상황이었다.⁵⁸⁾ 비동맹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남북간 상호경쟁이 백중지세의

56) 외무부 정보2과, “북괴 ‘사노청’ 7차대회 결과분석.”(10월 18일자, 수산: 전제외공관), 1981. 첨부문서 ‘북괴 사노청 7차대회 결과분석’ 참조.

57) 외무부 국제연합과, “회의 참가 정부 대표단 임명 및 훈령 통보.”(12월 7일자, 문서번호: 81-3887), 1981. 첨부문서 ‘정부 대표단 훈령’ 참조.

58) 합의(Consensus) 저지 교섭목표는 친한 18개국 대 친북 15개국으로 설정하였다. 외무부, “제2차 비동맹 및 개도국 노동장관 회의 참가 자료.”, 1981.

형국으로 나타남으로써 당시 한국 외교의 초점이 북한과의 체제경쟁이라는 범주 내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회의 참가와 관련한 외무부의 공식 보도자료에 의하면, 북한관련 내용은 전혀 없으며 비동맹·개도국과의 관계개선과 노동분야의 협력 등의 사안에 대해서만 의미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제3세계 외교의 명분과 실체가 달랐던 것이다.

참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던 북한 대표가 회의에 불참한 사실도 주목된다. 이에 대해 외무부는 총괄 평가보고서에서 “북괴의 대이란 지원에 대한 이라크(이라크) 조야의 대북괴 감정이 악화 상태에 있음에 비추어, 시세의 불리를 감안, 북괴 스스로 불참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분석하였다.⁵⁹⁾ 당초 외무부는 북한의 참가가 확실할 것으로 보고, 노동부장관을 비롯한 7명에 달하는 대표단을 파견함으로써 견제 구도를 형성하려고 하였으나 정작 북한측이 불참함으로써 애초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외무부의 상황 판단 오류가 빚은 외교력의 낭비였다.

제3세계를 대상으로 한 남북간의 외교경쟁은 대체로 보이지 않는 수단과 방식을 동원한 간접적인 대결방식을 띠었다. 그 중에는 상대국의 비위 사실 또는 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들추어내고 공격함으로써 자국의 반사이익을 추구하는 경향마저 있었다. 북한 해외공관이 관련된 밀수사건을 계기로 한국 외무부가 적극적인 대북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친 사례가 대표적이다. 1980년 5월, 네팔 주재 북한 대사관이 수입한 냉장고 상자 안에서 비디오 카세트 및 텔레비전 10세트(1세트당 현지 시세 1만불), 재봉틀 15대, 라디오 130대가 현지 공항세관에 적발되었다. 전달인 4월에는 버마(현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이 수입한 냉장고 속에서도 손목시계 23,000개가 적발되어 버마 당국에 압수당한 바 있었다.⁶⁰⁾ 6월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주재 북한 외교관

59) 외무부 국제기구 조약국, “제2차 비동맹 및 개도국 노동상 회의 및 종합관찰 및 건의사항”, 1981.
60) 북한 버마대사관측이 수입 사실을 부인(면세장의 공관장 서명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물품을 압수당하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채 유야무야되었다. 반면 네팔사건은 현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실제 밀수행위가 주재국 관헌에 의해 적발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외무부

들이 5년 동안 담배, 향수, 캐비어(Caviar) 등을 밀수입하여 한 중국식당에서 팔다가 적발된 사건까지 발생하였다.⁶¹⁾ 그에 따라 6월초 네팔 신문에서 북한 밀수사건이 보도되었으며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의 해외 언론에서도 북한의 밀수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공관이 북한 밀수사건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작성하여 현지 언론기관 및 주요인사에게 배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자료에서는 1976년 북구 제국에서 발생했던 북한공관 밀수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외교관 면책특권협정이 체결된 비엔나에서 동 협정을 위반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은 아이러니컬한 일이라고 지적하였다.⁶²⁾ 네팔 밀수사건 결과, 사건에 연루된 북한대사관 상무담당 2등 서기관 김하빈은 현지 당국의 강제출국 요청을 받고 8월초 평양으로 귀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⁶³⁾

북한 밀수사건은 한국의 여타 해외공관에 의한 적극적인 대북 비난활동의 계기가 되었다. 인도 주재 한국공관에서는 ‘대북괴 선전봉쇄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현지 유력 영자신문 트리뷴(TRIBUNE)의 기자와 접촉, 네팔에서의 북한 외교관 추방사실과 관련, 북한의 상습적 외교관 밀수 사실을 설명하고 관계자료를 전달하였다. 그 결과 10월 5일자 “DIPLOMATS AND DRUGS” 제하의 5단 기사에서 북한이 과거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지에 주류, 담배 등을 암거래해왔다는 사실과 그같은 행위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북한 외교단 자신의 향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공금 재원 조달’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 등이 보도되었다.⁶⁴⁾ 북한 해외공관원들이 연루된 밀수사건은 국제적 룰을 무시한 북한 외교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 동시에 이 기회를 이용한 한국 외무부의 북한 비난 여론 조성 노력이 중첩된다는 측면에서 냉전

주네팔대사관, “지급, 북한공관 밀수사건 적발 보고.”(5월 30일자, 관리번호: 80-984), 1980.
61) 외무부, “착신전보, 북괴 밀수.”(6월 12일자, 수신: 장관, 발신: 주 오지리 대사), 1980.
62) 외무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북괴밀수 기사 보고.”(6월 18일자, 수신: 외무부장관), 1980. 별첨자료 ‘북괴밀수규탄’ 참조.
63) 외무부, “지급, 북괴 밀수사건.”(8월 27일자, 관리번호: 80-2239), 1980.
64) 외무부, “착신전보, 북괴관계 기사보고.”(10월 6일자), 1980.

기 남북 외교 갈등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북한 외교관들의 국제적 탈법행위가 당시 집중적으로 발생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같은 사건들이 언론에 소개되고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된 데에는 한국측 외교 역량의 일정한 역할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V. 맺으며

냉전기 제3세계를 대상으로 한 남북한 외교는 대결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제3세계를 무대로 상호간의 경쟁과 대립, 비방과 방해, 파괴와 공작이 난무했다. 자국 정부에서 걸려온 해외전화를 현지 교환원이 상대 공관으로 잘못 연결하자 이를 역이용하여 상대방의 정보를 편취할 정도로 우연과 필연을 넘나들며 서로의 틈을 노렸다. 한국의 현지 외교관들은 북한의 활동과 현지 친북인사들의 방북 초청활동 등에 대해 늘 주시하였고 이와 관련된 보고들을 끊임없이 본국으로 보냈다. 주로 주재국에 대한 북한의 고위사절단 파견문제, 주재국 관리들의 북한 방문 초청문제, 주재국의 북한 상주공관 설치문제 등을 중심으로 치열한 정보전, 탐색전을 벌이고 대응전략을 세워나가면서 분주하였다. 냉전기 제3세계를 무대로 한 한국외교의 실체는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감시와 동향과악에 집중함으로써 많은 시간과 재정,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주재국 대사는 친북인사의 활동과 관련해서 특이 사항이 없는 경우조차 “주재국에서는 북괴 책동 없음”이라고 보고해야 했다. 나아가 북한의 외교적 성과를 지연, 방해, 저지 또는 차단하기 위한 노력 역시 한국 외무부의 공적(公的) 업무였다. 그같은 활동이 냉전기 한국 외교업무의 본령(本領)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외무부는 제3세계 각국의 주재 공관을 통해 북한의 외교 교섭현황을 감시하면서 직접 일선에서 대응조치를 취하였다. 따라서 한국 외교라인을 통한 대북한 정보탐색과 공작외교는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남북한은 공히 안보외교에 치중하면서도 군사외교의 측면에서는 그 성격이 달랐다. 한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베트남전쟁에 파병함으로써 현상적으로는 군사외교를 지향하였지만 그 실상은 외교적 측면보다 한미관계에 내재된 정치군사적 성격의 반영이었다. 따라서 냉전기 한국 외교사에서 독자적인 군사외교 현상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한국전쟁 이래 군사 주권의 제약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다. 이같은 면모는 제3세계를 대상으로 인적, 물적 지원과 수출을 활발히 전개했던 북한과 다른 상황이었다. 한국이 방위산업 제품을 수출할 경우, 사실상 미국 정부 및 미국의 기술도입 회사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도록 돼있던 구조가 냉전기 남북간 군사외교 경쟁에 비대칭 요소를 불러왔다.

공개된 1980년대 초 외무부 문서로 볼 때, 제3세계를 대상으로 한 냉전기 남북의 외교경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적잖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권위주의적이었던 전두환 정권의 성격과 특징을 고려할 때, 외무부의 정책과 활동을 단지 외무부의 공개자료로만 이해하는 것은 역부족이며 부적절한 측면마저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안기부, 국토통일원 등 관계 부서의 검토 가능한 자료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좀더 객관적인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관계부서들 간의 업무조율 과정과 실제 정책결정에 이르는 근원적인 힘의 관계와 맥락 또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민감한 남북관계 관련 비공개문서들이 공개문서로 대폭 전환될 경우, 좀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막 집권한 신군부 중심의 권위주의적인 군사정권 하에서 한국의 외교는 남과 북의 상호 인정이나 공존과는 거리가 먼 경쟁과 흠집내기로 일관했으며, 조용하면서도 지속적인 정보전과 때로는 격렬한 방해활동의 연속으로 나타났다. 외교 또한 당대 정치권력의 성격과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1980년대 초 전두환 군사정권의 권위적, 일방적, 반민주적, 반공적 성격이

외무부 업무에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 점에서 1980년대 초 남북의 외교경쟁은 신냉전기 남북 정권들의 성향에 조응하는 응당한 귀결이었다. 이같은 흐름은 1980년대 중반의 신데탕트기를 거쳐 1990년 전후의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세계적 사조에 직면할 때까지 지속됨으로써 한국 외교사의 일면을 조성한 것으로 이해된다.

참고문헌

- 국토통일원 편, 『남북한통일제의자료총람』 제2권(1975.1.1.~1985.12.31.), 국토통일원, 1985.
- 김오동, “한국과 중남미.” 『국제정치논총』 제22집, 1982.
- 김태환, “북한의 제3세계 외교정책의 전략이념.” 『북한』 3월호, 1987.
- 김태환, 『북한의 제3세계 외교정책』, 국제문제연구소, 1987.
- 노중선 편, 『연표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서울: 사계절, 1996.
- 대한민국 외무부, 『대외관계 문서, 1979~1981』, (외무부 소장 전자파일).
- 박재규, “북한의 對 제3세계 군사외교정책.” 『한국정치학회보』 제16집, 1982.
- 박재규, “북한의 제3세계 군사외교정책.” 『남북한 정치통합과 국제관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6.
- 박종평, “제3세계의 외교정책과 한국-아랍 제국을 중심으로-.” 『광장』 1월호, 1983.
- 서재만, “제3세계 외교.”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한국국제정치학회, 1988.
-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교학과, 『한국외교 60년』, 외교통상부, 2009.
- 유중해, “비동맹 운동의 특성과 그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21집, 1981.
- 이기중, “북한의 대 제3세계 비동맹 외교정책.” 『고향정치학회보』 제1호, 1997.
- 전인영, “북한의 외교정책: 지속과 변화.” 『아세아연구』 제81호, 1989.
- 전현준, “제3세계에 대한 북한의 외교정책과 향후 전망.” 『전남개발』 제23호, 1990.
- 하경근, “비동맹운동과 한국.” 『국제정치논총』 제20집, 1980.
- 허문영, “북한 외교정책 변천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10집, 1994.

ABSTRACT

Foreign Competition in the Third World of the North-South Korea
on the Early 1980s
: Centering on the Published Diplomatic Documents(1979~1981)

Kim, Ji-Hyung(Seowon University)

Conflict and diplomatic competi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argeting the third world of the early 1980s, corresponding to the New Cold War was very serious. North and South Korea had foreign partners throughout the third world, and it was a large part of North and South Korea's diplomatic powers. It means that a very large proportion of diplomatic activity took place in the third world. To target the third world, North and South Korea wasted diplomatic resources on slander, with no affect on foreign policy during the Cold War. In the North-South Korea diplomatic confrontation, South Kore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ried to protect the superiority of South Korea, and diplomatic efforts were developed to block the Anti-South Korea maneuvers of North Korea carried out by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Non-Aligned Nations and the UN. At that time, by hosting large events, North Korea was trying to exert influence in the leading Non-Aligned Movement. In addition, military weapons exports to countries of the third world, began to expand military diplomacy.

Keywords : North-South Korea relations, Third World, New Cold War,
Non-Aligned Movement, military diplomacy,
Pro-South Korea diplomacy

투고일: 2013년 06월 28일, 심사일: 2013년 07월 14일, 게재확정일: 2013년 08월 04일